
2009. 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인천환경공단 >

인 천 광 역 시
(감 사 관 실)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각종 직원 인센티브 관련규정

○ 특별승진 및 승급 :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제28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초과 할 수 없다.

○ 포상가점 :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포상의 평정) ①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자격평정은 “별표7”에 의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공인회계사 등의 평정은 1인 1종에 한하며, 포상 및 자격평정은 당해 직급 근무기간 중에 취득 및 수여 받은 것에 한한다.

○ 제안제도 : 「인천환경공단 제안규정」

제26조(포상) ①채택된 제안의 제출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②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2의 등급별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한다.

③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제안에 대하여는 기준포상금의 20% 범위 안에서 특별제안 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경영개선포상), 제28조(장려상)

제29조(인사상 특전), 제30조(기타보상), 제4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 특별 인센티브 성과급 : 「인천환경공단보수규정」

제21조의4(특별 인센티브 성과급) ①예산절약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원가절감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려는 제도로 인건비 및 대형 사업비중 경상경비를 감축한 경우와 기여도에 따라 특별 인센티브 성과급을 익년도 3월말 이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2) 특별승진 진행사항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시키고자 2008. 7. 25.자로 “직원 특별승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승진예정자 지명(이사장)→공적조서 청구(총무팀)→승진예정자 결정(이사장)→인사위원회 의결→승진임용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별승진은 직장인에게는 최고의 인센티브 제도로써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 그 결정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인천환경공단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다르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공적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내부는 물론 공단 외부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업적이 있어야만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미흡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용절차를 밟아 2008. 8. 25.자로 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을 살펴보면, 제2호와 제3호는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특별승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줘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번 특별승진의 규정으로 삼고 있는 제1호는 대내외적으로 해석하는 자

마다 판단이 모호함으로 최소한 제1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서 누구나 이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의를 달지 않도록 세부규정을 정하여 추진하였다면 공단에서 추구하는 조직의 일체감과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되나 그러한 세부규정 없이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함으로서 자체계획 수립시 공단내에서 스스로 밝힌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하였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4) 특별승진대상자 공적과 관련하여

승진대상자들의 공적요약을 보면, 가히 말은바 위치에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었다고 칭찬하여 좋은 극히 마땅하지만, 과연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지는 앞에서는 언급하였듯이 공단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직원의 공적을 보면서 특별승진의 정도까지의 공적인가는 과연 다시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과 ★★★★★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에서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결과를 생산한 사실은 있으나, 본연의 업무에 극히 충실히 함으로서 얻은 결과가 상당수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위에서 나열한 각종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그 공적을 치하할 사항이고, 그 밖의 공적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공적에 걸맞는 각종 포상과 근무평정 산정,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승급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그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처 분 요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는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공단내 인센티브제도 또한 근무평정, 성과금 지급, 제안제도 운영, 특별 승급, 특별승진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추후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정한 방침 등을 수립하여 그 공적

에 걸 맞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2. 특히 특별승진은 이러한 인센티브 중 가장 큰 혜택을 감안하여 특별히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공정한 방침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부터 승진결정까지 공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상대적인 반감 또는 사기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인천환경공단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에 따르면 공개채용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다만 경력직 채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방침에 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되어 있고, 제12조에서는 서류전형의 기준 및 합격인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단내 제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필기 및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그이외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방침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009년 제1차 기능직(단순노무직 1명)을 채용하면서 위 규정에 따르면, 기능직에 대한 공개채용시에도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절차를 먼저 거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필기시험은 1명 채용에 대한 비용대비와 업무성격 등을 판단하였을 때 그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은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치 않는 분야로서 그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응시자 전원을 대

상으로 면접을 통해 최종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이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 2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필기시험 50%와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 등 직원채용에 있어서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나, 면접위원에 대한 규정이 위 규정이외에는 전혀 없어 대외적으로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등 좀 더 유능한 공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시험별 면접위원의 선정구분을 채용직급별 또는 직종별 등 다양하게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단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2조의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표를 보면, 각 평점요소마다 최고점수를 탁월·우수·보통·미흡(각 4점차)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에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면접시험이 전체 당락의 50%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점요소(5개 항목) 및 배점기준으로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면접시험의 특성상 심사위원 중 한 사람에 의해서도 당락이 결정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절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능직(단순노무직)에 대한 채용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면접시험과 관련하여서도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무제한적이지 않도록 세부적인 선발규정이 필요하며, 면접심사 심사표 또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접시험 점수 결과와 관련하여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필요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접위원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 분 요 구]

1. 직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절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공단내 사정에 맞게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능직(단순노무직)의 채용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2. 또한 면접시험과 관련하여서도 면접위원 선발(예시, 외부전문가 필수 포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시고, 면접심사 심사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평가항목(현행 5개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음)과 배점(현행 평점요소별 4점의 간격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조정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면접위원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만을 합산하여 심사평가하는 방법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 등 구체적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현 황]

1) 인천환경공단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평정자	확인자
3급 이상		본부장	이사장
4급이하	본부 각 팀·실	팀장·실장	이사장
	사업소	소장	이사장

2) 인천환경공단 2급 근무평정자 현황

구분	연도별 평정대상자 및 평정자								
	08년 상반기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08년 하반기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09년 상반기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경영 관리 본부	2	경영관리본 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2	경영관리본 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1	경영관리본 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사업 운영 본부	4	경영관리본 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4	본부장→이사장 2급-사업본부장	이사장	5	본부장→이사장 2급-사업본부장	이사장
경영 혁신 실		경영관리본 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1	이사장	이사장	1	이사장	이사장

[위법부당내용]

1) 인천환경공단 기구 및 직위 현황

인천환경공단은 임원 2명(이사장과 상임이사 1인)과 정원 399명(일반직 331명, 기능직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경영혁신실과 경영관리

본부, 사업운영본부로 되어 있고 경영관리본부에는 총무팀 등 3개팀으로, 사업운영본부는 운영지원팀 등 3개팀과 9개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종 현 최고직급인 2급이상의 주요 간부들의 직위를 보면 경영혁신실장, 총무팀장, 사업운영본부장, 가좌·승기·청라·송도·운북사업소장으로 있습니다.(2009년 상반기 근무평정시 직위임.)

2) 2급 직원의 근무평정자 부적정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30조(평정의 시기 및 평정자)에 따르면 평정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는 위 현황 1)과 같고, 다만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위 현황에도 불구하고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3조(근무성적 평정방법)제8항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결원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자 또는 확인자의 직상급 감독자를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여 평정을 하여야, 그 근무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의 근무성적 평정자를 보면, 2008년 상반기 평정시에는 상임이사가 공단내 2급 전체에 대하여 평정을 하고 이사장이 확인을 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는 상임이사가 경영관리본부만을 맡고 있으므로 경영관리본부의 2급에 대해서만 평정하고, 사업운영본부는 사업운영본부장(2급 직원)이 사업운영본부내 2급을 평정하고 경영혁신실장과 사업운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직접 평정과 확인을 모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현 조직상 불가피하여 위와같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였다 하여도 공단내 임원이 2명 있으므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2급 평정자에 대하여 따로 지정함이 타당(현 공단내 직제상에는 상임이사가 타당)함에도 경영혁신실장과 사업운영본부장에 대한 평정자를 이사장 본인이 직접 함으로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 근무성적 평정

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운영본부의 2급 사업소장에 대하여도 같은 2급인 사업운영본부장이 직제상 사업소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2급을 평정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서 현 조직 운영상 가장 공정성을 요할 수 있는 근무평정 체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의 2급 근무평정은 위 현황과 같이 같은 2급에 대한 평정자가 이사장, 상임이사, 사업운영본부장 등 서로 상이하여 추후 승진후보자 선정 등 근무성적 평정 자료 활용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계약직의 근무성적평가 부적정

「인천환경공단계약직채용및보수등에관한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에 따르면 채용된 계약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 근무성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 제4조에는 직원의 직종을 행정직, 기술직, 계약직,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28조(평정의 범위)에서는 계약직의 경우 직종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계약직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계약직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직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였어야 하나, 인사규정상의 조항을 근거로 직원 근무평정시 계약직을 포함(직원 3급에 대한 평정시 계약직 3급을 포함)하여 평정함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직원 3급의 평정 분포비율을 보면 당초에는 3급이 총 17명으로 수-3, 우-7, 양-7의 분포비율이 나와야 하나, 계약직을 포함함으로써 총 18명으로 수-4, 우-7, 양-7의 분포비율이 나와 결과적으로 수를 받는 직원이 1명 더 생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근무평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상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근무평정을 하고자 할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를 나눠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 인천환경공단의 경우에는 현재 1급 직원은 없고 상임이사 1명이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운영본부 중 경영관리본부만 관리하고 있어 현 공단내 최고위직인 2급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환경공단에서는 현 조직체계상에서는 2급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상임이사가 타당할 것이며,

2. 조직체계의 변화를 주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운영본부장의 직위를 상향조정(상임이사 또는 1급)(1급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1급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상임이사가 타당)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추후부터는 2급에 대한 근무평정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직 직원의 근무평정은 「인천환경공단계약직채용및보수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시기 바라며, 계약직관련 규정과 인사규정 등의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가. 예산편성 세부지침 없이 예산 편성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6월 30일까지 통보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7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해당 공기업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 예산편성 기준은 ①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의 형평성 및 지방공기업간 균형유지, ②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을 도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경영 실적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지방공기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하며, 이 예산편성기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며, 본 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예산편성 하였음은 물론 행정안전부 기준에도 없는 항목을 편성·집행하는 등 다음과 같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부적정

○ 예산편성기준의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부서 또는 사업 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08년도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이사장과 상임이사 앞으로, '09년도 역시 이사장과, 상임이사 앞으로 각각 편성한 것으로 부서 및 사업범위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다. 「회의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의 구분 없이 예산 편성 집행

○ 회의비라 함은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야 하고,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잡비 등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주로 확대간부회의 후 간담회, 자체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등 인천환경공단 내부직원들과의 내부행사에 해당하는 회의를 하면서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임직원 경영혁신 워크숍관련 사우나비 집행 등이 있으며 회의비의 주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식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회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하여 실제 구체적인 회의 관련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없어 그 경비 내역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라. 「경조비」 부당편성

○ 축·조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나 환경공단에서는 경비의 복리후생비로 예산편성기준에도 없는 경조비를 부당하게 편성하여 직원들의 경조비 용도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환경공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자체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경비의 성격상 유사한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지침이 없고,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등 구분이 모호함에도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를 소액편성한 후 회의비 및 부서운영비로 별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사업추진과 유사하게 업무추진비 집행하듯이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경조비 등 내부 기준 없이 예산 편성 및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골프장 코스 관리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현 황]

○ 0000스포츠센터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현황

예산편성액	입찰총금액	당년도 계약액	총용역부기금액	계 약 기 간
266,000	532,400	233,344	466,688	‘09.1.9 ~ ‘10.12.31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법 제1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공기업법 제76조는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을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 계약이 있고,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전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이 있습니다.

○ 0000스포츠센터에서는 '08년도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이 '08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09년도 용역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 의결에 의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님에도 '09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266,200천원 범위 내에서 '09년도 계약할 것과 총532,400천원의 금액으로 2년간 계약하는 조건으로 '09년도 예산(안) 요구액 266,000천원 범위 내에서 계약할 것을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09. 1. 9 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약체결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계약 목적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그 계약 방법을 결정하여 적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행위]

1. 업무추진비 집행과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기관의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하고, 내부소속 구성원 등에게 집행이 가능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제경비로서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서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에서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단순히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격려, 직원들 식대 지출 등의 사유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2.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 부적정

○ 2008. 3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집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노고를 격려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제6호 마목에 의거 식사 제공만 가능하나,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열거되지 아니한 각종 행사비 지원, 노조사무실 개소식 지원금, 후원금 전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위배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내여비(관외출장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제1항에 의하면,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8년 5월 12일자로 타 시·도 비교견학 계획에 따라 비교견학에 필요한 경비 968,400원을 지출하였으나, 타 시·도 비교견학이 사정에 따라 취소되어, 지출한 경비 968,400원을 익일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9일이 지난 2008년 5월 21일자로 반납하였으며,

○ 00사업소에서는 ○○○씨가 수질원격 감시체계 연찬회 참석에 따라 필요한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타 직원에게는 지급한 경비를 타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관외출장여비 지급시에는 계획수립 후 계획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계획이 취소될 시에는 지급된 여비를 익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학익사업소에서는 직원출장시에는 형편성을 기하여 여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00사업소 폐쇄에 따른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현 황]

○ 00사업소 폐쇄 현황

- 서류 이관일 : '09. 6. 1.(00사업소 ⇒ --사업소)

[위법부당내용]

○ 「인천환경공단사무관리규정」 제6조는 직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인천환경공단 사무인계인수 시행 내규」에는 이사장, 상임이사, 직제규정에 의한 해당부서장은 인사명령, 직제개편,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7조의 작성요령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는 사업운영본부-제1743호('09.5.25) 근거에 의한 폐쇄 조치계획에 따라, '09. 6. 1일부로 00사업소와 관련된 문서는 --사업소 내 보관조치하고, 예산은 본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쇄된 00사업소에서는 폐쇄준비를 위해 관계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서식에 의거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여 이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

나, 공사 설립 시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수받은 서류에 대한 내역 등이 없이 공단설립 이후 서류에 대해서만 인계인수서 작성을 하여 이관 조치하였는바, 송림사업소 폐쇄에 따른 관계규정에 의한 인계인수가 소홀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환경공단 사무인계인수 시행 내규」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인계인수 절차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조치하시기 바라며, 보관·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 사 기 관 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직인의 인영부 보존 소홀 및 공고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인천환경공단 직인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직인(회계관계직인을 포함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직인의 신조, 개각, 폐기시 공단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상기와 같이 직인의 신조 또는 개각으로 인영을 인영부에 보존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2009. 2. 1. 현재 등록되어 사용 중인 직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보존하지 않고 있으며, 공단 사명의 개정, 사업소의 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직인이 신조 또는 개각되었으나 단 한차례도 공단의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직인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천환경공단 이사회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환경공단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 제5조(정관)제2항에서는 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2조(이사회)에서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22조(예산과 결산)에서는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 보고하고, 이 중 결산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9조(감독)에서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인사규정 및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개정사항과 중요재산의 취득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정관」 제4장(제24조 ~ 제32조) 이사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와 정관을 종합하면, 인천환경공단 이사회는 인천광역시시장의 승인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은 공단내의 중요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동의를 받을 수는 없고 정관

에서 정한대로 실시 심사를 통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설립이래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인천환경공단의 중요사항인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보수 규정 등 중요개정사항, 정관개정사항 등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하면서 실시 심사를 통한 이사회 의결을 구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총 6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 심사 시에는 이사들의 의견 개진 등으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또는 수정의결 등의 결과가 나와 심도 있는 이사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서면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심도 있는 안건검토 없이 공단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등 이사회 운영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이사회 운영시 조례와 정관 등에서 정한 환경공단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00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현 황]

- 학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
 - 방류수 재이용 가능 회시 : '09.3.2
 - 방류수 재이용 취수설비 설치 승인 : '09.4.20
 - 공유재산관리 유상사용허가 통보 : '09.9.16
 - 처리수 재이용 협약서 체결 진행 중 : '09. 10. 23현재

[위법부당내용]

○ 하수도법 제21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살수용수·세차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4조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처리수 재이용 관련 민원업무추진 부적정

○ (주)○○○○○○(이하 “민원인”이라한다)는 '09. 2. 24 학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 물관리과에 00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공사 해사업체 부지에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0개 해사업체에 해사 세척수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시에선 환경

공단 00사업소에서 검토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고, 6가지 조건이행 시 1일 약 5,000톤의 재이용수를 사용가능함을 회시하였습니다.

○ 이후 민원인은 '09.4.17 "방류수 재이용 취수설비 관련 협조요청"을 00사업소에 제출하였고 내용은 "시에서 재이용을 득하였고 그 후 공단의 담당자들로부터 실무적 자문을 받아 향후 취수설비에 대한 공사 시행코저한다"고 하면서 첨부 서류는 ① 시 공문('09.3.2), ② 취수방안 선정사유, ③ 공사계획(도면) 등입니다.

○ 00사업소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그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를 했어야하나 민원내용에도 있듯이 서류제출 전 수차례의 민원상담 후에 '09.4.2 인천광역시 00건설본부로부터 "00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을 위한 관로매설 계획 협의 의견 통보"만을 첨부하여 '09.4.20 "취수설비 설치승인 통보" 하면서 시의 조건 준수 등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00사업소가 인천광역시와 인천환경공단 간 체결한 「하수·분뇨·폐기물 등 처리업무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아니함에도 처리수 재이용 취수설비 설치요구를 부적정하게 승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 '09.6.29 민원인은 공사완료 후 조형물 마감승인 요청하였고, 6가지 조건 이행 없이 '09.7.31 방류수 취수협조 요청을 하여 사용하던 중 '09.8.10 부지점용 신청을 00사업소에 제출하였고 시에서는 '09.9.16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통보하였으며, 시, 인천환경공단, 민원인은 '09.10.9협약서(안)에 대하여 회의 후 협의완료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그 협약서 체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방류수 재이용 관련하여 00사업소의 업무분장 현황

업무분장일	담당자현황			
	직급	성명	담당기간	비고
'08.8.25	기술8급	◇	'08. 8.25 ~ '09. 4. 3(7개월)	
'09.4.3	기술4급	◆	'09. 4. 3 ~ '09. 4.22(20일)	- 취수설비 설치 승인
'09.4.22	행정8급	□	'09. 4.22 ~ '09. 5. 6('09.5.6~'09.8.3(출산휴가)
			▽('09. 5. 6 ~'09. 6. 4)	'09.8.3~'10.7.1 육아휴직
'09.6.4	행정8급	■	▼('09. 6. 4 ~ '09. 7. 1)	업무대행자
'09.7.1	기술5급	△	'09. 7. 1 ~ '09. 9.13(2개월)	휴직중 (업무대행자 ▼)
'09.9.13	기술8급	▲	'09. 9.13~ 감사일 현재	

○ 위 현황과 같이 방류수 재이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을 하면서 00사업소에서는 잦은 업무분장 및 업무의 인계인수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09.4.20 취수설비 설치 승인 이후 '09.6.26 민원인으로부터 조형물 마감승인 요청시까지 그 업무 추진에 있어 담당자들이 아닌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추진됨으로써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사후조건 이행여부 등이 결여되어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인천환경공단 직제규정에 의하면 인천환경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환경개선팀 및 사업소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운영본부의 운영팀지원 및 시설관리팀은 처리장(사업소)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처리장 운영관리 지도감독, 처리장 관련 사업개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총괄계획수립, 시설물 지도점검 및 관리대책 수립 등 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함에도 '09년 3월부터 '09년 9월까지 처리수 재이용 업무추진 관련하여 00사업소 내에 설치된 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설치·완료·사용되었음에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점인 '09년 9월에서야 그 사실을 파악하는 등 사업소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00사업소에서도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부서인 사업운영본부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사업운영본부와 사업소간의 업무추진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자체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 인천환경공단 경영혁신실에서는 '09.9.22~'09.9.28까지 “00사업소 방류수 재이용 취수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

과를 보면 행정상조치로 시정 1건, 신분상조치로 “훈계” 2명, “주의촉구” 2명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의 징계요구 사유는 「인천환경공단 인사 규정」 제48조제1항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는 본 규정에 의거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건은 하수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00사업소에서 재이용수 취수 설비 설치 승인해준 사항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 감사시행내규」 제20조에 의한 “주의”는 법령, 사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상 “훈계”는 그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에서의 조사결과인 신분상조치의 사유를 보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환경공단 취업 등에 관한 규정」 제6조1)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지만 '09.9.14 공유재산사용허가와 '09.9.21 민원인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아 사후처리가 완료됨을 감안하여 “주의촉구” 2명, “훈계” 2명에 대하여 처분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훈계”조치는 공단의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처분한 것으로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건 당시 기술5급 △에 대한 업무담당 범위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 되는 등 업무담당자별 관련자의 업무추진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천환경공단은 00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에 관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초 민원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정확한 검토를 하여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자체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단 본부 또는 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처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사업소 지도·감독부서에서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의 지도 및 감독업

1) 인천환경공단 취업등에 관한 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는 직원은 법령과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현재 업무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추진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사업운영본부에서는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하여 그 업무추진의 과정을 매뉴얼화하여 각 사업소에 통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각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어 각 사업소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운영본부에서는 6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재이용 관련하여 관로 및 살수차를 이용한 재이용수 공급에 대하여 관련법의 취지에 맞도록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와 협조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00사업소에서는 자체 업무연찬 및 사업운영본부의 협조 등을 통해 사업소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4. 업무분장에 대하여 형식적인 업무분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업무의 한계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업무분장 계획 수립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중요사업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 발생시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5. 경영혁신실에서는 학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관련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적절한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감사시행내규와 인사규정시행내규의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 내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시어 업무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6. 시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추진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인천환경공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인천환경공단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처리수 재이용과 관련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추진 절차를 시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094천원 상당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계산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착수일	준공 (예정)일	계약금액	도 급 자
○○○○ 처리설비 보수보강공사	‘08.10.24	‘08.10.24	‘08.11.19	100,672	(주)●●환경

[위법부당내용]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의 건설 공사를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경제적 약자인 건설현장의 비정규직인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계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①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②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 2008. 07. 0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는 같은 예규에 따라 공사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처리 설비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을 공사비에 계산하면 아니 됨에도 국민건강보험 796천원, 국민연금보험 1,298천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계약체결 준공함으로써 2,094천원 상당의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2,094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하시고 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884천원 상당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착수일	준공 (예정)일	계약금액	도 급 자
○○○ 가스홀더 튜브 교체공사	‘07.10.04	‘07.10.09	‘07.11.26	103,356	●●환경산업(주)
○○○ 가스홀더 튜브 교체공사	‘08.09.02	‘08.09.04	‘08.10.29	112,970	●●환경산업(주)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안전관리비) 별표 14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8-27호. 2008. 10. 22) 에 따라 4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환경공단가좌사업소에서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공사원가에 계산하여 (주) --환경산업과 계약체결

시공 하였으나 그 정산에 있어서는 2007년도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
용품 구입 사진을 2008년도 안전관리비 정산시 그대로 첨부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아 2008년도 공사시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 하지 아니하
여도 될 2,884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부당하게 지급된 안전관리비 2,884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하시고
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1천만원이상 건설공사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규정에 의하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당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당 1천만원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 내용 등)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별 업무 내용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공사 계약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천만원이상의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약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환경공단 산하 6개의 사업소에서는 불임 현황

과 같이 1천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입찰 공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거 해당 공사의 업종에 맞는 건설업 등록자만이 입찰 또는 1인 견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000 설비 유지보수 공사와 47건”의 공사를 부당하게 계약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이 후 공사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와 계약토록 하시고, 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공사 대장 통보·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건설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에 따라 도급 금액 1억 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공사 정보시스템 : <http://cws.kiscon.net/main.aspx>)을 이용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는 이를 이행토록 관리함은 물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환경공단에서는 ○○○○ 및 통합보안시스템 구축공사외 10개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지 30일이 지났거나, 이미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 관청에 사실을 통보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2. 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00저감시설 제작설치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2)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별표 3) 규정에 의거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2009.3.2 ○구 ○○동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 되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00사업소에서는 분배조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시설(Scrubber, 처리능력 200㎥/min)을 2007.11.26 (주)대하엔지니어링과 60,989천원에 계약하여 2007.12.24 설치·준공처리 하였음

그러나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분배조에 대한 악취배출 실태(성분, 농도, 용량 등) 파악 및 그에 맞는 악취방지시설을 선정·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실태조사 등을 소홀히 하고, 악취방지시설(Scrubber) 설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설계기준 없이 부적정하게 설치·준공처리 하였으며,

또한 동 시설 설치 후 복합악취에 대한 관할구청에서 점검한 결과 분

배조에 설치한 악취방지시설(Scrubber) 대한 악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2008.7.2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성적 669배, 기준 500배이하) 초과, 2009.7.6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성적 1,000배, 기준 300배이하) 초과되어 개선명령(권고)을 받는 등 악취방지에 소홀하게 관리함.

[처 분 요 구]

앞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시에는 악취 배출원별 실태(성분, 농도, 용량 등) 파악 및 그에 맞는 악취방지시설을 선정·설치하고,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00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관리 소홀

[현 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현황

사업소명	초과일	초과항목 및 검사결과 (기준 10mg/ℓ이하)	처분 받은 사항 (과태료 납부일)	비고
○○사업소	2008.1.10	부유물질(SS) 15.6mg/ℓ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0천원 (2008.4.8)	
	2009.3.24	부유물질(SS) 12mg/ℓ	개선명령 및 과태료 4,000천원 (2009.6.16)	
●●사업소	2008.1.10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7mg/ℓ 부유물질(SS) 16.8mg/ℓ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0천원 (2008.4.8)	

[위법부당내용]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사업소 및 ●●사업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계

수질 자체가 법정 수질기준 보다 높다는 이유와 겨울철 저수온 등으로 인한 미생물활성화 저하, 고도화 처리 공사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법정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현황과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시 2008.1.10 및 2009.3.24 각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합계) 10,000천원의 처분을 받아 예산을 전용(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하는 등 운영관리에 소홀하였음.

[처 분 요 구]

1.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수질)관리를 함에 있어 환경적(작업 환경, 수온변화 등)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디스인센티브 적용) 등을 도입(개선)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사기관명] 인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물품관리관 역할 소홀 및 중요물품 취득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물품관리관 역할 소홀

○ 『인천환경공단물품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공단자체 물품수급관리 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분임포함, 이하 같다) 물품출납원에게 시달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말 현재량과 다음 연도 분기별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명백히 표시한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제출된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며, 각 물품출납원은 매 분기마다 분기개시 10일전까지 분기별 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각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수급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하고, 각 물품출납원은 매 반기 물품수급실적보고서를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 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인천환경공단의 각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시달한 작성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서 및 물품수급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물품관리관은 이를 종합심사 조정,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물품의 수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공단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작성지침을 시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관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2. 중요물품 취득 관리 부적정

○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물품출납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단가 50만 원 이상의 비소모품(이하 “중요물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물품명·물품분류번호·규격·수량·금액 및 수급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의 결재를 얻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인천환경공단의 각 물품출납원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요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지체없이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007.9.1일부터 2009.9.30일까지 총 194건 계 392개 1,263,282,590원의 중요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없이 중요물품을 사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지침 시달 및 물품수급관리 종합심사 등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중요물품 취득 관리 시 행정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환경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00사업소 관사 입주대상자 선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인천환경공단관사관리시행내규」 제12조(입주대상자 및 순위결정기준) 제1항에 의하면, “관사의 입주대상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자와 필수요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시행내규 제10조(입주자 모집 등) 규정을 보면, 운영부서의 장은 입주자 모집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입주가능세대수, 입주예정일 및 사용기간, 입주신청 자격 등등)사항을 전 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9년 6월 15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4호실(105,206,305,306호)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자중에서 배점표를 작성한 후 관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입주자 공고 없이 기존 입주자 4명(6년이상 사용하였음)에게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00사업소 관사 입주대상자 선정시 「인천환경공단관사관리시행내규」에 의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시고, 한번 이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주 대상에서 제외시켜, 환경공단 직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